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주의 긍정적 측면 깊은 골에 빠져선 안돼”

文 대통령 ‘조국논란’ 응답

“정치권, 국정·민생 전반 살펴야 국회, 檢개혁 법안 조속 처리를”

이른바 ‘가족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민심이 ‘유지·사퇴’ 입장으로 갈라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행위”라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조 장관 거취에 대

한 여론의 반응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조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주최 측 추산 약 200만명)가, 지난 3일에는 광화문 조 장관 규탄 집회(주최 측 추산 약 300만명)가 각각 열린 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개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정부포상제’는 공무원 위한 잔치

5년간 10건 중 7건 전·현직 공무원

국가 헌신에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 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흥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포상 10건 중 7건 이상을 전·현직 공무원에게 수여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여한 포상은 16만9821건으로 이 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4.9%에 해당하는 8만385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챙겼다.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

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는 게 흥의원 실지이다.

앞서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지난 2016년 포상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의 포상 싹쓸이 방지 대책으로 국민주천포상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36.7%에 해당하는 85건을 수여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적을 거둔 사람에게 포상한다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석대성 기자

노년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경제·정서·죽음’ 관리 조력



100세 시대 5060 신중년이 된다 직업탐색 가이드 ③ 노년플래너·생활코치

관련자격·교육 민간서 이뤄져
베이비붐 세대, 도전하기 좋아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현대인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 이런 숙원과는 반대로 실제로 사람들은 불현듯 길어진 인생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막연하게 고민하게 됐다. 준비된 이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고통이나 형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년생활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메트로신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생 2막 새로운 도전: 베이비부머 직업 탐색 가이드’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도전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세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노년플래너·생활코치(라이프코치)’다.

◆노년플래너

노년플래너는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이 삶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돋는 역할을 한다. 중년이 되면 노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바쁜 중년의 삶에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년플래너는 노년기에 이른 노인들이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일, 경제관리, 정서관리, 죽음관리,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일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년플래너는 적지 않은 나이에 노년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며, 베이비부머 역시 다르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와도 직결된 노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했다.

노년플래너가 되기 위해 특별한 전공이나 학력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자격이나 교육은 주로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이해, 노후 관리, 아름다운 노화, 노인자살 예방, 시니어 상담, 존엄사, 장례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기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신직업 특화 훈련과정)으로 노년플래너 훈련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강남대학교 산업협력단, 시니어파트너즈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민간자격으로 ‘노년플래너’ 자격증이 신설되어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을 배울 수도 있다.

◆생활코치(라이프코치)

오랜 인생경험과 지혜가 있는 베이비부머가 관심가질 직업으로 생활코치

(라이프코치)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생활코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직면하는 중요한 삶의 이슈나 문제의 답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고, 목표를 설정해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돋는다.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잠재 능력을 발견해 강화시켜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해당 코칭 교육과정은 늘어나고 있는 주제이며 최근 중장년층의 진입도 활발한 편이다. (사)한국코치협회에 따르면 2009년 300명 수준이었던 자격 취득자수는 2015년 기준 3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직업생활의 경력을 토대로 비즈니스코칭, 즉리더십코칭, 기업전략코칭 등의 영역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코칭 관련 교육은 협회 및 평생교육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코칭협회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교육상담협회(부모교육코칭전문가), 지자체(예, 성북구 부모지원센터)에서는 부모코칭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커리어코칭아카데미 평생교육원 등에서 커리어코치 양성과정, 한국라이프코칭 연합회 및 한국코치협회 등에서 생활코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지난달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시민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현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법 도입 4개월… ‘교육위’만 규정 지켰다

법안심사 하는 소위원회 25곳 중 7월 이행률 36%, 8월 8% 불과

‘일하는 국회법’ 도입 후 규정을 이행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단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사 현황 분석 결과, 9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실시한 곳은 교육위와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나뉘는 농해수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만 ‘일하는 국회법’을 지켰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 정례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52명 중 찬성 237명으로 가결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80%에 달하는 의원이 법안에 동의한 셈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17개다. 이 중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25곳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맞은 6월부터 규정을 준수한 관련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7월에는 이행률이 36%에 그쳤고, 8월에는 8%까지 떨어지면서 ‘무용지물’ 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법안 시행 후 네 달 연속 규정을 지킨 곳은 교육위가 유일하다. 교육위는 특히 올해 3월 이후 5월을 제외하고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국회법

에 따라 회의를 열 수 있지만, 통상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소위를 소집하는 게 관례다. 여야 간사 협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난달부터는 여야가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릴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20대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기도 하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돼 있어 9월 국회를 끝으로 여야는 ‘총선 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불황이 엄습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보호와 퇴진 사이에서 진영 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석대성 기자 bigstar@